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첫 번째 혁신도시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 혁신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앞서 영상물을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와 혁신도시 선정, 올해 1월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오늘 그 역사적인 첫 삽을 뜨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풀어 냈습니다.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곳도 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 주신 공공기관의 노사 양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해 대대로 살던 고향 땅을 내어 주신 이곳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주와 생계, 취업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도시의 주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오늘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혁신도시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그리고 교육과 국제 교류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의 근거는 제주도민 여러분의 자치 역량과 강력한 열망입니다. 스스로의 결의로 새로운 길을 찾고, 추진하는 사업마다 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도 다른 지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먼저 실시 계획 승인을 마쳤고, 보상 시작 두 달 만에 70%라는 높은 협의보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더욱이 이곳 서귀포는 앞으로는 태평양, 뒤로는 한라산이 자리 잡은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고, 그리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곳입니다. 또한 2013년까지 12개 학교, 9천 명 규모의 영어교육도시도 조성됩니다. 지금까지 몇 군데서 만들어 왔던 영어마을과는 전혀 다른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관광과 교육,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나아가려는 제주 혁신도시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줄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해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귀포 혁신도시는 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제주 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의 모범이 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이곳에 정착하는 공공기관

의 직원과 가족 여러분이 이전보다 훨씬 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발전전략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자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국토를 새롭게 재편하는 대역사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되기만 했습니다. 1960년 20.6%였던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48.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1년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된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 본사의 82%, 공공기관의 85%가 전 국토의 10분의 1을 조금 넘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난·교통난·생활비·환경오염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고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분산과 균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균형발전은 또한 국민 통합의 전략입니다. 경쟁력만 높다고 국가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전 국민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 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커지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은 수도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인재가 모여들고 첨단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은 비워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수도권은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질적인 계획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수도권은 비워진 공간을 푸르게 활용하면서 품격 있는 생활환경과 최첨단 지식기반을 갖춘 쾌적하고 매력적인 국제도시로서 세계와 함께 경쟁해 나가야 합니다. 국내의 자원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함께 경쟁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 수준 높은 도시가 되어야 서울이 서울답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는 지방을 대하는 철학과 방식이 다른 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빼고는 모두 지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880건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이양된 업무의 건수가 모두 240건인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방교부세율이 15%에서 19.24%로 높아지는 등 지방의 자율재정도 지난 4년간 3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자치제, 주민투표법과 같은 주민참여 방안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분권의 철학이 상징적으로 구현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과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균형발전영향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도 지방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고, 지방이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이 서로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는 혁신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창원, 구미 등 7개 시범 산업단지에서는 산·학·연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 생태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생명과학클러스터, 문화산업클러스터, 농업클러스터, 테크노파크 등도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지방대학입니다. 인재를 키워야 혁신도 지역 발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누리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8대 권역의 23개 대학이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육성되고 있고, 누리사업에는 110개 대학에 130개 사업단이 구성되어 지방대생의 10%에 이르는 19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의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2003년 27%에서 올해 40%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1조 5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발굴해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16개 지역별로 각기 4대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산업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왔습니다. 선택적 규제 특례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했고, 낙후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70개의 신활력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위해 2004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었고, 그 규모

도 매년 늘려 올해에는 6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제주계정이 신설되어 제주도에 배정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지난해 1천 8백억 원에서 올해 3천 6백억 원으로 두 배로 늘렸습니다.

오늘부터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이러한 지역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강력한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전된 공공기관이 산·학·연 클러스터와 협력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전략산업이 활성화되면 지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역동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에 펼쳐질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환경·교통·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을 담아 낸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 도시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높이고 기존의 도시들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들을 거점으로 농촌 생태계와 공동체를 복원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5년간 20조 원을 투자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도 2촌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과 전원마을 조성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이 찾고 은퇴자가 돌아와 어울려 살 수 있는 농촌마을이 조성되면 도시에서 농촌까지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국토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균형발전정책이 잘 갈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참여정부가 비전과 전략, 로드맵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간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1인당 지역총생산이 2004년부터 수도권을 앞질러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수출 비중도 2002년 61%에서 지난해 68%로 높아졌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입도 그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대세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과 사람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강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입니다. 1단계 정책이 정부와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2단계 정책은 민간 부문, 특히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의 토대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 투자 기업에 세제혜택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모여들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은 국회에 곧 올라갈 것입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의 연설은 5분이나 7분입니다. 할 말이 많으면 10분입니다. 오늘은 아마 20분 정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 하면 균형발전정책이 앞으로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가

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정책의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가지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이나 법, 시행령 하나 하나를 만들 때 모두 균형발전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칩니다.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특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조건이 불리 하더라도 지방에 배치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단히 가짓수도 많고 복잡합니다. 잠시 한눈팔면 지나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혁신도시 기공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 끝나고 조금 더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냐면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대못을 박아 두고 싶은 것입니다.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 주어야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조 6천억 원 정도 거두었고 올해는 3조 원 이상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26%를 되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3.2배를 나누어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만든 세금이지만 그 세금의 배분 과정에 균형발전정책이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꾸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었는데, 근래 와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적하니까 정책을 바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불안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내신반영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인구 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반영비율을 낮추면 공교육과 지방 고등학교가 죽는 것입니다. 모두들 서울에 있는 특목고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면 지방의 고등학교나 지방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 이제 제가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장관도 다 열심히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젠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져서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입법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정책이 어디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 전부 발굴하고 연구해서 지켜 나가는 지방의 시민 조직 또는 지도자 조직이 구성돼야 합니다.

저는 여야가 갈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고 토론해서 각기 자기 정당 안에서 이 균형발전정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고만 해도 20분인데 원고에 없는 것까지 말씀드려 여러분께서 많이 지루하셨을 것입니다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고 협력해 오셨듯이 조금 더 노력하면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도 서울 사람 이상으로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못질해야 되는 대목마다 빠뜨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굳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